

보도 일시	배포 시	배포 일시	2023. 1. 9.(월)	
담당 부서	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	책임자	과 장	조문희 (02-2100-2510)
		담당자	사무관	변후정 (02-2100-2514)

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.

- 한국일보 1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한국일보는 1.9일 「“취약층 불법사채 내몰릴라” 법정 최고금리 27.9%까지 인상 검토」 제하 기사에서
 - “금융당국이 20%까지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7.9%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” 고 보도

2. 금융위 입장

-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과 금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으로,
 -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